

여성노동자 퇴직강요 늘고있다

직장을 구하려는 여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한 여성노동자들이 결혼이나 임신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용자들의 퇴직강요를 받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 이효재)이 지난 20일 '신종 결혼 임신 퇴직 및 조기정년 철폐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밝힌 퇴직강요 사례에 의하면 기존의 명시적인 퇴직제는 없어졌으나 무연고지로의 인사발령으로 퇴직을 유도하거나 압력 회유 폭행 등에 의한 퇴사 종용, 과다업무부과 업무축소 등으로 더이상 근무할 수 없게 만드는 편법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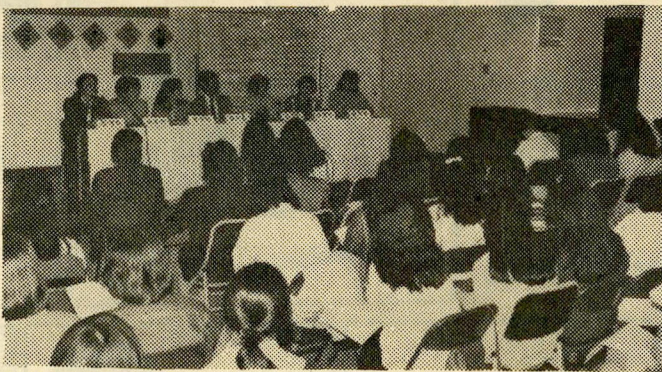
이같은 사례들은 76년 여행원 결혼각서제도의 철폐와 85년 방일물산 이경숙씨의 조기정년철폐소송에서의 승리 이후 사용자들에 의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종 퇴직제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사무자동화와 경영합리화를 추진하면서 감원이

불가피해지는 사업장의 경우 기혼 및 장기근속여성노동자가 제일 먼저 그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 불황시에 기혼 및 장기근속여직원을 전혀 경험이 없는 영업직을 맡게 해 실적이 부실하다는 압력을 주면서 퇴사를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우는 처음에 임시직으로 채용하고 결혼, 임신 시 재계약을 중단하는 사례다. 임시직 채용은 사용자 입장에서 수당지급이나 호봉책정이 안되는 점을 이

대의 차별정년퇴직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례는 지방대학 보험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사립학교 교사 간호사 등



지난 20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신종결혼 임신 퇴직 및 조기정년 철폐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종로3가 성당에서 있었다.

되는데, 이 경우 노조의 조직력이 약하고 여직원 비율이 낮은 경우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온 석탑노동연구원 부원장 최영희씨는 "이 문제는 단지 기업주의 인식부족이나 여성들의 권리의식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에 앞서 성차별적인 사회경제구조의 문제다"라며 사용자들의 의도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구체적인 대응으로서 "무엇보다 남녀노동자들의

결혼·임신한 노동자 각종 편법으로 퇴직압력 임시직 채용으로 재계약 중단 등 경영비용 절감노려

용해 막대한 경영비용을 절감하는 유리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같은 퇴사강요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취업규칙에 정년 나이를 명시해 조기 정년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구시

과 병원에 가장 많이 잔존해 있는데 대구의 Y대학의 경우 기능직 여직원 50명과 부속기관근무 여직원 35명에게 28세 정년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퇴직강요사례는 은

전문직 뿐 아니라 중소기업 규모의 여행사 잡지사 상호 신용금고 등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백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례가 76%나 되고 노조가 있는 곳이 50%가

의식변화가 필요하며 노조결성과 노조민주화를 통해 조직적 대응을 강화하고 여직원회 및 노조여성부의 활성화 등을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미숙기자>